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



글 황성빈
릭교대학(立教大學)
사회학부 교수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지적한 고노 요헤이
중의원의장 인터뷰 기사(출처: 아사히신문,
「右傾化への歯止め必要〈衆院選 ここに注目〉」,
2012년 12월 12일자)

작년 12월 일본에서 아베(安倍晋三)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가 호전되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까지 결정되면서 정권의 행보가 자못 의기양양하다. 현재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재정 의하고, 집단적 자위권도 용인하고, 전쟁과 무력의 포기를 담은 이른바 평화헌법을 자주헌법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 목표라고 주장하는 자민당의 보수·우파가 세력을 확장하며, 1955년 이후 자민당의 주요축을 이루어왔던 리버럴(liberal) 세력은 현저히 퇴조했다. 또 극우적 언사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씨가 대표인 일본유신회 등의 등장으로 일본 정치는 ‘우경화’를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 중의원의장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지적도 있다(아사히신문 2012년 12월 12일자 조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이다. 아베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기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의 담화)를 수정

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른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강제동원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군의 포괄적인 관여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도쿄재판(東京裁判)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등을 ‘합사(合祀)’한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참배에 대해 ‘영령(英靈)에 대한 애도’는 일본인 마음의 문제라며 주변 각국의 우려를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며 비판한다.

그런 한편 여론의 차원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언제까지 사죄를 되풀이해야 하느냐며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심정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고, 특정 국가(주로 중국과 한국)나 민족에 대한 배외주의적 주장과 시위행동을 전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국과 한국에 대한 기피반응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세 등등한 국내용 레토릭(rhetoric, 편집자 주: 수사법)과는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지난 7월의 참의원선거의 압승 이후에도 아직 ‘우경화’를 구체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언론인들의 ‘우경화’ 인식은 한국의 언론이 전하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사히신문의 주필을 지내고 동아일보에 <와카미야의 東京小考>라는 고정 칼럼을 집필중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씨는 “다수의 일본인에게에는 아베 수상과 이시하라씨의 우경화 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만”, 한국, 중국, 북조선의 자극이 “내셔널리즘을 부추겼고 아베 정권은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용해 등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던지며, “일본도 삼가고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도 너무 쉽게 일본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측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동아일보 2013년 1월 10일자).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출처: 위키피디아 [ja.wikipedia.org])

| 와카미야의 東京小考 | 일본의 우경화를 돕는 일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



독도-센카쿠 분쟁-로켓 발사-
일본엔 초강력 태풍
때마침 오른쪽 향해 서있던
'아베의 등' 밀어줘

한국 새 대통령에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본에도 확산되고 있다. 나도 새 정권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파견한 특사를 파듯하게 맞아준 것은 기쁜 일이었다. 차기 대통령은 일한 관계를 수복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게 손아지는 한국의 눈초리는 파갑다. 지난해 말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한포럼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한국 측 참석자에게서 분출했다.

무리도 아니다. 압승한 자민당의 공약에는 헌법을 개정해 국방군을 만든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식전행사를 정부 주최로 한다” “역사교과서의 근원제국조항 수정을 검토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과거를 깨끗하게 사죄한 무라이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수정은 예전부터 아베 총리의 지론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로 실현된다면 나조차도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다.

포럼에서 일본 측 의견은 나눠졌지만 “우경화에는 실책이 없다”는 반론이 많았다. 예컨대 자민당이 이긴 것은 민주당 정권의 실책에 대한 반동일 뿐이다.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소신각구제 효과로 자민당이 외척을 너무 많이 가져간 것뿐이다. 자민당에 대한 기대는 아베 총재가 선거에서 내건 정책 재선에 맞춰져 있다. 아베 총리도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론을 관철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론에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 위험한 우경화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하물며 일본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못박아둔 등의 주장이었다.

한국 측이 다시 비판했다. 총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도 약진했는데 총선 전야 유신회 대표에 오른 인물들은 아베 총리보다 우파적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堂義太郎) 씨 아닌가. 주변권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확실히 우경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등...

이번 공방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느꼈다. 다수의 일본인에게에는 아베 총리와 이시하라 씨의 우경화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어떤 참정자가 말했듯이 골프에서 티샷을 할 때 자신이 오른쪽을 향해 서있다는 걸 눈치 채지 못하면 위험하다. 티구가 크게 OB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서있는 일본을 한국은 단지 매섭게 비판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의 부활을 예견한 사람은 몇 개월 전까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고, 총선거에서도 가세를 올린 것은 바람에서 뒤바뀐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뒤바뀐은 무엇인가. 육상경기의 3단 멀리뛰기에 비유하면 이경박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 방문과 일한에 대한 발언이 홈,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중국에서의 반일 폭동이 스프, 그리고 정르는 북한이 쏘아올린 정거리 로켓이었다. 모두 일본을 자극해 내셔널리즘을 부추였고, 아베 정권은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용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국과 중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북한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나타냈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냐”고 반론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돌아보면 자민당이 당장이 반제국가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점은 작년 여름부터 돌아선 돌풍이 오른쪽을 보고 서있던 아베 선수의 등을 밀어줬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만 책임질 생각은 없다. 한국 언론 다수도 일본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늘 격한 표현으로 압박적으로 책망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고심해 짜낸 아시아여성기금을 조금 더 배려했으면 고노 담화 수정과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헌에는 반대해도 지위대도 지금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담원한 뜻이 “일본은 군대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위화감을 느낀다. 두 나라 모두 당당한 군대를 갖고 있는 데다 특히 중국은 군비 확장으로 주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군국주의의 과오를 반한 일본은 별개라는 점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고 해외의 전쟁에서 휘말리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런 점을 일깨워 이해해주고 있는가. 평화와 위해 피를 흘려라 하지 않는 국가라고 일선매김 당하는 일도 있다는 점이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이해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왜 일본만 손발이 묶여 있어야 하나’라는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은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도 너무 쉽게 일본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와카미야의 東京小考> 칼럼 캡처(출처: 동아일보 2013년 1월 10일자 30면)

우경화에 대한 일본 전국일간지 보도 분석

이 글에서는 아베 정권이 등장한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일간지인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를 대상으로 우경화에 대한 보도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각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우경화’를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한 결과, 아사히는 96건, 요미우리 47건, 마이니치 84건, 산케이는 92건이 추출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 신문의 입장 지형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것이다.

흔히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리버럴’한 입장이고(일본에서는 진보나 혁신이라는 용어는 공산당이나 과거의 사회당에 대해 쓰인다), 요미우리과 산케이는 보수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경화’에 대한 관심은 아사히와 산케이가 높게 나타났고 보수를 대표하는 요미우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의 경우 ‘우경화’를 우려할 추세로 보는데 반해 요미우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우경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일련의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언사는 ‘보통국가화’를 지향할 뿐이지 ‘우경화’는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면 보수 신문의 경우가 훨씬 많게 나타난다. 공통점도 있다. 우경화를 제기하는 주체(정보원)는 대부분이 중국, 한국이라는 점이다. 일부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과 자민당의 전 중의원 의장 등의 발언이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했고 외부 필자들의 기고는 각 신문사의 입장과 공명하는 논평이었다.

공영방송 NHK의 경우

먼저 우경화 문제를 둘러싼 ‘중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객관·중립의 보도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방송협회(이하, NHK)의 뉴스 기사를 분석해보면, 해당기간 동안 ‘우경화’를 포함하는 기사는 모두 11건이었다. 데이터베이스는 NHK의 뉴스원고를 수록한 G-Search(<https://db.g-search.or.jp>)를 이용했는데, NHK의 경우 뉴스센터에서 작성하는 원고를 산하의 모든 방송국과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어 검색된 기사의 건수가 뉴스의 빈도나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경화를 다룬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보원은 한국 야당의원, 다나카(田中均) 전 외무성의관, 한국 대통령, 중국 미디어, 그리고 후쿠시마(福島瑞穗) 사민당 당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의장, 북조선 미디어였고, 그 밖에 뉴스의 직접적인 소스(정보원)로 아베 수상과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등장하는데, 모두 우경화 비판에 대한 반론이었다.

2012년 12월 4일에 공시되어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 기간에는 ‘우경화’를 포함하는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중립을 의식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주로 한국, 중국, 북조선에서 제기되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비판을 ‘우경화’ 비판으로 전하고 있다. 2013년 2월 14일에



오노데라 방위상이 6월 1일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경화라는 지적인 오해”라는 내용을 연설하는 모습(출처 : NHK, 2013년 6월 1일자)

는 북조선 미디어의 비난, 4월 23일에는 고노 요헤이 씨의 한국 강연, 그리고 4월 24일에는 일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고, 다음 날에는 사민당 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한 기자회견을 다루었다. 이처럼 NHK의 우경화 관련 보도에서 우경화를 지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으로 국한되고 있고, 국내의 정치인 등이 정보원이 된 경우에도 두 나라의 입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문맥화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6월 1일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 연설에서 “우경화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과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 논의는 지역안정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내각과 같은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같은 날 이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중국군 간부가 센카쿠 국유화가 현상유지라고 주장한 오노데라 방위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소식을 전했고, 남중국해 섬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인 베트남과 필리핀 참석자들의 의견을 소개해, 중국과의 대립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처럼 NHK는 ‘우경화’에 대해 어떠한 논평이나 입장을 부여하지 않으며, 건조한 톤으로 뉴스를 전달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비판이라는 문맥에서만 우경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특기해야 할 것이다.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 헌법 개정문제, 종군위안부 문제는 모두 중요한 정치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런 뉴스에서는 ‘우경화’라는 단어는 쓰이고 있지 않다.

리버럴신문 아사히의 경우

아사히의 경우는 분석기간 동안 96건의 기사에서 ‘우경화’가 등장한다. 월별 분포는, 2012년 12월에 34건, 2013년 1월에 8건, 2월 1건, 3월 3건, 4월 6건, 5월 6건, 6월 16건, 그리고 7월 14건, 8월에 10건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많은 기사가 게재된 작년 12월과 올 7월에는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6월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의 ‘우경화 지적은 오해’라는 설명을, 그리고 8월에는 아소타로(麻生太郎) 부총리의 나치스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8월 15일을 전후해서 역사인식 문제를 다루는 해설기사 등에서 우경화가 다뤄진 경우가 많았다. 해당기간에 ‘우경화’가 등장하는 사설은 아래의 4편이었다.

작년 12월 14일자 사설에서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아시아의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이해를 나타내는 움직임도 있지만, 많은 나라

2012년 12월 14일 '총선거 헌법 개정 리셋 버튼은 아니다'
 2012년 12월 17일 '자민 대승 아베 정권으로 안정된 정치'를
 2013년 6월 4일 '우경화 부정 '오해'라고 주장하자면'
 2013년 6월 18일 '수상의 반론, 이론(異論)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Simon Wiesenthal Center to Japanese Vice Prime Minister: Which 'Techniques' of the Nazis Can We 'Learn From'?

July 30, 2013

The Simon Wiesenthal Center urges Japanese Vice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Taro Aso to immediately clarify a statement at a lecture yesterday in Tokyo.



Remarking 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so spoke of how "we can learn from [that] technique" of the Nazis, who changed Germany's Weimar constitution "unnoticed."

"What 'techniques' from the Nazis' governance are worth learning—how to stealthily cripple democracy?" asked Rabbi Abraham Cooper, associate dean of the Simon Wiesenthal Center, a leading Human Rights NGO, adding, "Has Vice Prime Minister Aso forgotten that Nazi Germany's ascendancy to power quickly brought the world to the abyss and engulfed humanity in the untold horrors of World War II?"

"The only lessons on governance that the world should draw from the Nazi Third Reich is how those in positions of power should not behave," Rabbi Cooper concluded.

“독일 나치 정권의 바이마르 헌법 개헌 수법을 배우는 게 어때냐”는 발언으로 한·중은 물론 미국의 인권단체 ‘사이먼 위젠탈 센터’ 등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은 아소다로 부총리(출처 : 사이먼 위젠탈 센터, 「Simon Wiesenthal Center to Japanese Vice Prime Minister: Which 'Techniques' of the Nazis Can We 'Learn From'?」, 2013년 7월 30일자)

는 전쟁의 반성에서 억제적인 방위력을 관찰해 온 전후 일본의 노선전환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로 인접 국가들과 마찰이 고조되는 것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12월 17일자 사설에서, 중국과 북조선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민당의 일련의 공약이 과연 일본의 안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후 일본의 행보를 전환한다는 시각이 인접국에서 확산된다면 국익은 손상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차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숙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답습해 일중관계를 재건했다”며 그러한 “현실적 지혜와 판단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후 우경화 문제는 뜸해지지만, 간헐적으로 한국과 중국, 북조선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뉴스로 등장하다가, 6월 4일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의 ‘우경화는 오해’라는 주장의 연설에 대해 사설을 실었다. “방위상이 국제회의에서 이런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고, “역사인식을 둘러싸고는 아베 수상의 발언이 불신을 초래했고, 우경화 비판을 초래하는 원인은 바로 역사를 둘러싼 아베 정권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변명 대신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길을 솔직하게 제안하는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군

국화 일본'의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사히신문은 우경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마찰로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또 미국에서도 일본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경종을 울리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사히신문의 입장은 40년의 정치 취재를 회고한 와카미야 전 주필의 칼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편집자 주 :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대외정책으로 아시아 중심정책을 표방)를 지향하는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의 우경화에 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는 작년 11월 일본의 ‘극단적인 내셔널리스트’가 지역의 번영을 해칠 위험에 대해 영국의 신문을 통해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무라야마 담화 등을 수정하려는 아베 씨에 대해 사설에서 못을 박았다.”(아사히신문 2013년 1월 12일자 조간)

보수신문 요미우리과 산케이의 경우

이어서 요미우리과 산케이의 보도를 살펴보자. 이 두 신문의 ‘우경화’는 주변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이 역사문제를 정치, 외교에 이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한다. 먼저 요미우리에서 ‘우경화’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모두 47건이었다. 작년 12월에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올 7월과 8월에 각각 6건의 기사가 있었다.

2012년 12월 5일자 조간은 중의원 선거 일정 공고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은 정권안정, 러시아는 경제교류 기대, 중국 한국은 ‘우경화’ 경계”라는 제목을 달았다. 12월 8일자 조간은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山口那津男)씨가 자민당의 헌법 개정요건 완화 움직임에 대해 “너무 오른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도록”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자민당이 압승한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 다시 ‘우경화’ 우려는 중국과 한국만이 제기하는 문제로 바뀐다. 12월 20일자 ‘아베 정권의 과제 일미동맹강화 구체화를’이라는 특집기사에서는 미일동맹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집단적자위권 인정에 대해, “노다 수상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 일부에서 ‘우경화’라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

PROJECT SYNDICATE



Print

Joseph S. Nye

Joseph S. Nye, a former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and chairman of the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is University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Era*.

Japan's Nationalist Turn

09 November 2012

TOKYO – Japan has been in the news lately, owing to its dispute with China over six square kilometers of barren islets in the East China Sea that Japan calls the Senkakus and China calls the Diaoyu Islands. The rival claims date back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t the recent flare-up, which led to widespread anti-Japanese demonstrations in China, started in September when Japan's government purchased three of the tiny islets from their private Japanese owner.

Prime Minister Yoshihiko Noda has said that he decided to purchase the islands for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okyo Governor Shintaro Ishihara from purchasing them with municipal funds. Ishihara, who has since resigned from office to launch a new political party, is well known for nationalist provocation, and Noda feared that he would try to occupy the islands or find other ways to use them to provoke China and whip up popular support in Japan. Top Chinese officials, however, did not accept Noda's explanation, and interpreted the purchase as proof that Japan is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In May 1972, when the United States returned the Okinawa Prefecture to Japan, the transfer included the Senkaku Islands, which the US had administered from Okinawa. A few months later, when China and Japan normalized their post-World War II relations, Japanese Prime Minister Kakuei Tanaka asked Chinese Premier Zhou Enlai about the Senkakus, and was told that rather than let the dispute delay normalization, the issue should be left for future generations.

일본의 극단적인 내셔널리스트를 지적한

조셉 나이(Joseph S. Nye) 교수의 신문 기고글

(출처 : project syndicate, 「Japan's Nationalist Turn」,
2012년 11월 9일자)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출처 : 위키피디아[ja.wikipedia.org])

지만, 이는 보통국가가 당연히 해결해야할 테마라고 내외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가 바뀌어 1월부터 5월까지의 간헐적으로 중국, 한국에서 제기되는 ‘우경화 비판’을 단신으로 게재하는데, 4월 25일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한다는 발언을 다루면서, ‘한국 대통령의 비판’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6월 1일에는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오노테라 방위상의 ‘우경화는 오해’라는 연설을 석간에 단신으로 게재하고, 다음 날 조건에는 해설 기사를 게재했는데, “아베 정권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비판과 혼동되어, 일본이 ‘우경화’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또 7월의 참의원 선거기간에는 야당의 ‘우경화 비판’을 부당한 ‘낙인찍기’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표를 노린 대중영합적인 주장이나 상대를 모욕하는 비방, 중상이 횡행하기 십상이다. 특히 주요논점의 하나인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후회귀’, ‘우경화’라는 레텔(レテル, 편집자 주: 라벨)을 붙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7월 5일 조건, 정치부장의 해설기사)

“민주당은 선거전에서 자민당 등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정당을 들어 ‘우경화’라고 레텔을 붙이는 전략을 전개했다.”(7월 20일 조건)

8월 15일 사설은 일련의 문제에 대한 요미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주목된다. 제목은 ‘중국, 한국의 반일(反日) 경사(傾斜)를 우려한다. 역사인식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달았다. “전후 일본은 쇼와(昭和)의 전쟁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재출발해 평화리에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정부개발원조와 자위대의 국제평화 협력활동 등을 통해서 폭넓게 국제사회에 공헌도 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왔는데, 유독 중국과 한국만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대일비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극히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어 이 사설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우경화 비판을 거론하며, 이러한 태도는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숙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정치가로서 역사인식을 포함한 영토, 주권에 관한 견해를 국제사회에 대해 끈질기게 호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후에 쌓아온 평화와 번영을 더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화해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요미우리다운 마무리인데, 중요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사설을 시작하는 “쇼와의 전쟁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라는 표현이다. 요미우리는 1931년의 만주사변부터 1945년의 패전까지 일본의 전쟁을 ‘쇼와의 전쟁’이라고 적고 있는데, 즉 그 이전의 메이지와 다이쇼의 전쟁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시한 무라야마 담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8월 16일자 사설도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한일양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연설에 대해, “위안부나 다케시마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억제적이었다”고 평가한 다음, “위안부 보상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었고, … 역사인식 문제로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대화나 교류를 거부하는 방식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요미우리는 일련의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통국가화’로 파악하며 이를 우경화로 비판하는 국내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역사인식을 둘러싼 주변국가의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며 경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첨예화시켜서 외교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배경에는 미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리고 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서, 재특회를 비롯한 배외주의 집단의 데모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기사 이외에는 거의 게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미우리의 논조와 비교해 산케이의 논조는 색다르다. 같은 기간 동안 92건의 ‘우경화’ 관련 기사를 게재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대부분은 우경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반론하는 의견기사가 많았다. 한국과 중국의 우경화 비판에 대해서는 이를 ‘반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내 좌파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해’를 푸는 적극적 선전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상호 비평의 문화가 없



중국과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한
요미우리 신문의 8월 15일자 사설

는 일본의 저널리즘에서 유일하게 다른 신문(아사히신문)의 논조를 비판하는 신문이기도 하다.

글을 마무리하며

‘우경화’ 문제를 둘러싼 일본 언론의 나름대로 다양한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애매한 문제로 남는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미국의 베트남전쟁 보도를 분석하며, 여론의 영역을 ‘일탈의 영역’, ‘정당한 토론의 영역’, ‘합의의 영역’으로 나누는 다니엘 할린(Daniel Hallin,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의 분석틀을 원용해 보고자한다. 일본 언론의 입장과 여론의 지형을 분석할 때는 이 세 영역에 더해 음양(陰陽), 또는 다테마에(建前, 편집자 주: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와 혼네(本音, 편집자 주: 진짜 속마음), 또는 겉과 속, 이성적 판단과 감정의 차원을 덧붙여도 좋을 것이다. 즉 겉으로는 합의의 영역인 것으로 비추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는 치열한 정치의 영역인 경우도 있겠고, 일탈의 영역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집단에 따라서는 암묵적 합의의 영역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인종주의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지난 8월 28일에는 마틴루터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 50주년을 기념해 각 신문에서 특집을 게재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고백처럼 슈퍼마켓과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정치의 영역임을 알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언론의 ‘우경화’ 보도를 생각해보면 어떤 분석을 내릴 수 있을지가 이 글의 문제관심이었다. 먼저 공영방송인 NHK의 보도를 통해서 ‘중간’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했는데, NHK에서 ‘우경화’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의 정치적 이슈로서 ‘정당한 토론’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중국과 한국 등의 주변국이 주로 역사인식의 문제를 들어 비판을 제기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정치의 우경화’보다는 ‘역사인식의 우경화’가 ‘외교 문제’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어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살펴보았는데, 아사히의 입장이 ‘우경화 비판’을 주로 중국과 한국의 비판으로 다루면서도, 미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함께 다루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전과 외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며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는 논조라면, 요미우리는 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등 일련의 자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보통국가화로 보기에 야당의 ‘우경화’ 비판은 부당한 낙인찍기이고, 인접국가의 역사인식 비판은 역사의 정치적 이용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정세를 고려해 첨예화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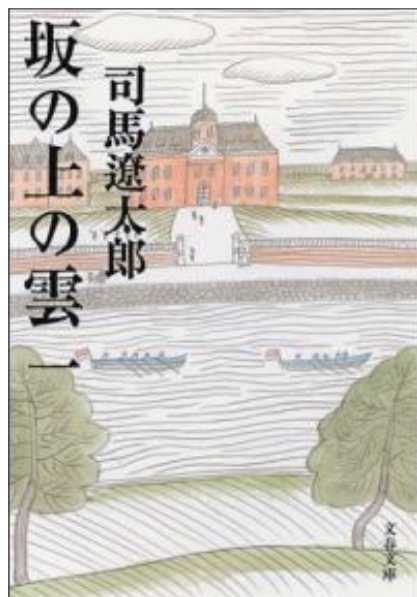
같은 보수신문인 산케이는 이러한 요미우리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정치선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국 내 좌파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적 집착을 드러내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배타주의적 역사인식과 외국 및 타민족에 대한 배외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우경화에 대해서는 요미우리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정치의 우경화 동향에 대해서는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반대, 요미우리와 산케이가 지지로 명확히 나뉘어있지만, 원론적인 대립이 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은 오히려 드물었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창당 이래의 목표였고, 자위대의 역할은 이미 극적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해외 파병도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우경화할 여지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후체제의 청산을 주장하는 아베 수상 또한 ‘미일동맹의 강화’ 의지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치의 우경화 동향은 잠잠할 뿐이다.

논쟁이 활발한 것은 오히려 역사인식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무엇이 논쟁의 대상인지가 애매할 뿐이다. 과거의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발언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인지가 분명치 않다. 그 동안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밝혀온 많은 역사인식 관련 발언에는 전쟁을 둘러싼 애매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난 전쟁’ 또는 ‘과거의 잘못된 국책’이라고 할 때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일본의 보수세력에게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대전으로 이어지는 20세기 초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국민적 작가로 불리는 시바 료타로의 대표작 ‘언덕 위의 구름’에서 묘사되듯이 그러한 인식이 ‘국민적 욕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요미우리가 쇼와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15년 전쟁인데, 이는 1930년대 군부의 폭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미국의 참전을 부른 1941년의 진주만 공격이 잘못된 국책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잘 들여다보면 시간축의 왼쪽으로 기울수록 좌경, 오른쪽으로 기울면 우경으로 볼 수도 있겠다. 좌경의 끝은 1985년의 청일전쟁과 그에 앞선 ‘대만정벌’이 있고, 우경의 끝은 1941년의 진주만 공격일 것이다.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전쟁과 원폭 투하, 항복의 기억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젊은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

이 지배적이었고, ‘상실’한 식민지와 만주침략의 기억은 망각되었으며 어쩌다 생각나는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에 다시금 아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냉전해체와 더불어 다시금 전쟁과 침략에 대한 기억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정점에서 발표된 것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였고, 여기서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기한 것인데, 그것을 이른바 ‘좌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우경화’가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러한 ‘좌경’에 대한 반발과 수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고, 그 비판의 화살은 왼쪽, 즉 한반도와 중국으로만 향하고,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으로 향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상대에 따라 다테마에와 혼네가 착종(錯綜, 편집자 주 : 이것저것이 뒤섞여 있음)하는 수사를 되풀이해왔다고, 언론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보다는 ‘외교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쟁은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늘 ‘우리 일본’과 그들의 감정적 응수로 끝나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졌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결국은 사회의 우경화를 가속시킨 것은 아닐까?

